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  
날 짜 2015. 9 . 24. (총 3 쪽)

## 보 도 자 료

###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 제3자 신고나 직권으로 심의 가능케 하는 개정안 오늘 입안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공인비판 차단에 남용될 우려 제기하며 반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오늘(9/24)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제3자의 신고나 직권에 의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며,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남용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대 및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의 반대 선언이 이어졌음에도, 방심위는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심의규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 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종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 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 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방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제3자의 신고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금번 심의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심의를 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

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더 이상 개정의 명분도 없고,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만 있는 이러한 심의규정 개정에 대하여, 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금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하다.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을 뿐,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가 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경고하며, 방심위가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끝>

2015. 9.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KK 언론위원회